

총평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직 9급 행정학은 20문제 모두 기출문제의 베이스(base)를 가지면서도, 변별력 있게 출제된 ‘최근 들어 가장 잘 출제 된 시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별력 있게 출제된 공무원 제안제도, 고충처리제도, 예산총계주의 원칙, 정책문제 구조화 등은 모두 수업 중에 충분히 강조했고,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연습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성과급적 연봉제는 개정법령 수업을 통해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COMPASS 행정학으로 준비했던 수험생 여러분의 결과는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시 기본을 충실하게 다져가는 공부가 합격의 지름길이자 왕도임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는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벌써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합격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출제유형분석

총론	2	재무행정론	2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5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3	지방행정론	2

0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④ [X] 우리나라의 예산의 형식은 예산주의(의결주의)이므로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하여 확정된 예산을 거부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예산의 형식	법률주의	예산주의(의결주의)
의의 및 특징	세입·세출 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 확정	행정부 편성한 예산을 매년 국회가 의결로 확정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
해당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일본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195, 196, 582

0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 ① 소비자안전규제
- ② 산업재해규제
- ③ 환경규제
- ④ 진입규제

해설 ①, ②, ③ [×] 소비자안전규제, 산업재해규제, 환경규제 등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④ [○] 인·허가, 등록과 같은 진입규제, 퇴거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7, 28

▶ ④

0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 ④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해설 ① [○]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 권한체계의 계층화를 요구하는 원리이다.
 ② [○] 통솔범위란 상관의 능률적인 감독을 위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대상인원의 범위 수, 조직단위의 수를 말한다.
 ③ [×] 분업(전문화)의 원리는 업무를 세분화 할수록 능률적·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원리이다. 하지만 지나친 전문화는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유발한다. 즉,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부처할거주의(부서 간 의사소통의 장애)와 전문가의 편협한 시각이 전문가를 무능하게 만든다는 훈련된 무능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④ [○] 부성화(업무집단화)의 원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연관된 업무를 묶어 조직단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리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방식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38, 339, 342

▶ ③

0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해설 ① [X]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 ③ [X] 6급 이하의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각각 담당하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행정자치부 X,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에 둔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고충 처리】 ③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④ [X] 성과상여금은 사람과 연공 중심이 아니라 업무실적, 직무수행의 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19, 520, 528, 571

▶ ②

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② 환경영향평가
- ③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해설 ①, ③, ④ [O]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재평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특정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 ② [X] 정책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는 활동인 환경영향평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는 정책평가라기보다는 정책분석의 특수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91, 301~303

▶ ②

0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 해설** ① [○] Dunn은 정책문제들은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잘(Well) 구조화된 문제, 적당하게(moderately) 구조화된 문제, 잘 구조화되지 못한(ill) 문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 ② [○] 구조화가 잘 된 문제는 대안의 결과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예측이 가능하므로 전통적인 방법(결과를 프로그램화 시켜 각 상황에 맞추어 문제 해결)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 문제 구조화 문제의 본질,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여, 문제를 명료화(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문제 구조화 단계는 ‘문제의 감지 → 문제의 탐색 → 문제의 정의 → 문제의 구체화’의 과정을 갖는다. 즉, 단계적으로 볼 때 마지막에 문제를 구체화·명료화 시키는 것이다.
- ④ [○] 문제 구조화의 방법에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유추분석, 계층분석 등이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18~222

▶ ③

0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 해설** ① [×] 정책집행의 하향론자(하향적 접근방법)들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 목표는 명확하고, 조직구조는 단순해야 한다. 또한 정책목표의 집행과정 동안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 ② [○] 사업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목표나 수단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 ③ [○] 수혜집단이 명확하고, 조직화 정도가 강할수록 강력한 지지가 발생한다.
- ④ [○] 배분(분배)정책은 대상집단이 주로 수혜자들이고, 안정된 집행 관행(SOP에 따른 집행)을 마련할 수 있어서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72, 282~284

▶ ①

0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 ②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 ④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③ [X] 법률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이다. 행정기관과 관료의 공식적 권한은 국회가 법률의 형태로 결정한 정책과 대통령이 결정한 주요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행정기관과 관련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195, 196

▶ ③

0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른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설 ④ [X] 내가 투입한 노력과 보상(산출)의 비율이 다른 사람, 즉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담스의 공평성(형평성)이론이다.

〈브룸의 기대이론〉

기대감(Expectancy)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0 \leq \text{기대감} \leq 1$)
수단성(Instrumentality)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1 \leq \text{수단성} \leq 1$)
유의성(Valence)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의 강도(+유의성, 0유의성, -유의성)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00

▶ ④

10 「공무원보수규정」 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 해설** ① [X]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경호실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 ②, ③, ④ [O]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연봉제의 종류〉

보수제도		적용대상	보수구조					
			기본급여	성과급여(지급기준)				
연봉제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	기본연봉	—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고위 공무원단	기본연봉 (기준급+직무급)	성과 연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매우미흡
					18%	12%	8%	0%
	성과급적 연봉제	5급(상당) 이상	기본연봉	성과 연봉	최상20%	상위30%	하위40%	최하10%
					8%	6%	4%	0%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28, 529

▶ ①

11 기존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속도(velocity)
- ② 다양성(variety)
- ③ 크기(volume)
- ④ 수동성(passivity)

- 해설** ④ [X]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크기, 다양성, 속도 이다.

〈빅데이터의 3대 특징〉

크기(Volume)	데이터의 물리적 크기 / 기업데이터, 웹데이터, 센서데이터에서 페타바이트(PB) 규모로 확장된 데이터가 등장
다양성(Variety)	데이터의 형태 /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 반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
속도(Velocity)	데이터의 처리 능력 /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춰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726

▶ ④

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 ②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 ③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설 ① [X] 분업은 대규모 조직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많은 사람이 일을 함께 할 때 필요하며, 세분화할 수 있어야 하고, 세분화된 직무는 가급적 동질적인 것들끼리 묶어서 조직단위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고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업무를 세분화하기 어려우므로 분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38

▶ ①

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해설 ① [X]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하지만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하여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것은 아니다. 동 법률에 규정한 경영평가는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8, 378~381

▶ ①

14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
-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지문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것이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예외는 「국가재정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다.

- ④ [X] 해당 보기는 국가재정법 개정(2014. 1. 1) 당시 삭제된 조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켜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가재정법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1.1.>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90

▶ ④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인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 ③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④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 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해설 ① [O] 국민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은 모두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X]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단위를 말한다. 교차기능조직은 내부통제기구(독립X)로 계선기관의 의사결정에 동의 및 협의함으로써 사전적 통제역할을 수행한다.

④ [O] 독립통제기관은 행정체제의 중앙통제조직으로 우리 정부의 전형적인 독립통제기관은 감사원이다. 독립통제기관은 행정체제의 두상조직(overhead unit) 가운데 하나로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누리며, 행정수반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사전달 통로를 가진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744~748

▶ ②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① [○] 탄력세율제도란 세법상 정해진 세율을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대통령령 등의 명령이나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X]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은 설치할 수 없다.

③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④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동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846, 849, 863

▶ ②

17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한다.
-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①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 개별소비세 20%를 재원으로 한다.

②, ④ [○] 특별교부세는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국가적 장려사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부된다.

③ [X]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교통안전교부세 X)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856, 857

▶ ③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②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 ③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 ④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해설 ① [○]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 되면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 제도적 동형화의 유형은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③ [○] 제도적 동형화는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구조와 기능을 닮아 가는 것을 말한다.
 ④ [×] 조직 배태성은 개인들이 행동할 때 사회규범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과의 경제적 합리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회관계에서 정당성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144, 145

▶ ④

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② 「정부기업예산법」
- ③ 「예산회계법」
- ④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해설 ①, ④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이 통합되어 제정된 것이다.
 ② [○] 「정부기업예산법」은 조달, 우편,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기업형 책임운영기관과 같이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정부기업)의 예산과 회계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③ [×]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77, 598

▶ ②

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 문제를 정의한다.
-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③ [X]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등으로 공직의 성격이 매우 정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게 된다. 반면 직업관료는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본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51, 468

▶ ③